

#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하중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71
----------	------

발의년월일 : 2022. 09. 30.

발 의 의 원 : 하중환, 김원규,  
김태우, 류종우,  
박종필, 손한국,  
육정미, 이재숙,  
전경원 의원  
(9명)

## 1. 제안 이유

2020년에 실시한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K-DST) 결과<sup>31)</sup>를 살펴보면, 전국의 181만 314명의 영유아 중 2.37%인 4만3천72명의 영유아가 발달 지연 수준인 ‘심화평가 권고’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러한 비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sup>32)</sup>임.

장애진단을 받은 영유아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등을 통해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장애가 아닌 경계선에 있는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공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현실임.

영유아기에는 뇌 발달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기이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발달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진단 및 개입을 통해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발달 지원 방향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1) 자료출처: 통계청(<https://kosis.kr/>), 건강검진통계,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현황(2012~2020)

32) 영유아 발달평가 ‘심화평가 권고’ 비율: 2018년(2.06%), 2019년(2.19%), 2020년(2.37%)

## 2. 주요내용

- 가.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영유아의 정상 발달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영유아 통합 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위탁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 까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등
-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영유아의 정상 발달을 위하여 사전에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원 및 심신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영유아 통합 발달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4.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
5. “발달 지원”이란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을 통해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발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3.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치료 연계
4.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방문 등 발달 지원 서비스 지원
5.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영유아 통합 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애위험 영유아의 정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통합 발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등

2. 영유아의 장애 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발달 지연 영유아 대상의 통합발달지원 보육서비스 지원
  4. 장애의 조기 발견과 정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5. 그 밖의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센터 설치·운영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개정 2011. 8. 4.>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20. 12. 29.>

###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